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방향 모색*

이 규 용**

I. 머리말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 쉽지 않다. 통계청의 201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 수는 전체 실업자 수의 절반에 이르고 실업률은 9.3%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41.7%로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10명 중 4명만 일자리를 갖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청년층 고용률을 연령별로 보면 20~24세 계층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고용률은 2000년 52.0%에서 2014년에 44.8%로 7.2%p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청년층들의 진학률이 높아 고용률이 낮다고 하지만 진학률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2006년 이후를 보더라도 20~24세의 고용률이 2006년 49.2%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청년층 고용사정이 나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5~19세 계층은 같은 기간 10.3%에서 9.2%로 1.1%p 감소하였으며, 25~29세 계층은 66.1%에서 69.1%로 3.0%p 증가하였다.¹⁾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의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의 고용률제고 정책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청년층 일자리 문제가 보다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계를 통해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구직을 단념하거나 취업준비로 힘들어 하고 있는 청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OECD자료(2014. 3/4)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15-24세)의 고용률은 OECD국가들의 평균 보다 13.5%p 낮으며 우리보다 낮은 국가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 이 글은 이규용(2015), 「청년고용대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예산춘추』 봄호(제38호), 국회예산정책처의 내용을 확장하여 정리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leeky@kli.re.kr).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이 있다. 정부의 고용률 70%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에 힘입어 전체 고용률(15~64세)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OECD 평균인 65.7%에 거의 근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청년층 고용사정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층 일자리 중 비정규직 일자리는 15~29세 기준으로 2014년 34.6%이고, 15~34세로 연령을 확대해도 28.0%에 이르고 있다. 30~40대 핵심연령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2009년 이후 다소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15~29세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이후 지난 10여년 동안 34~35%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²⁾ 또한 20대 청년층 일자리의 27.0%가 중위임금 2/3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일자리이다.³⁾

그 동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으며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재정투자 규모도 확대되어 왔다. 2010년 이후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을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내일 만들기,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청년 창업촉진, 청년 해외취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 들어 직업교육 및 훈련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청년층 일자리 예산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데, 2015년 청년 일자리 대책 예산을 보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규모는 4,964억 원에 이르며 수혜계층이 청년층 50% 이상인 사업예산은 1조 3,965억 원이다.⁴⁾

이러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한국의 인구변동추이를 고려할 때 청년층 고용문제는 향후 개선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알 수 없다. 현재의 여건을 보면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199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하락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당분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청년고용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 및 정책을 개관하고, 왜 청년고용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실현가능한 정책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한국노동연구원(2014),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표 III-6> 참조.
 3)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14 원자료.
 4) 이들 사업들은 훈련사업, 보조금사업, 고용촉진 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로 주로 청년층의 인적자원투자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자료: 고용노동부).

II. 청년고용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징

1. 청년고용정책의 전개과정

청년층 고용문제의 특징 및 원인에 대한 진단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모색되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청년고용대책은 2000년 이후부터는 구조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여 왔으며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2004년에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2009년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2010년 이후 청년고용대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2010년 4월에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발표한 후 2011년 10월과 2012년 9월에 2차 및 3차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논의가 촉진되고 있는 해외취업은 2006년에 발표된 ‘해외취업촉진대책’에서 시작하여 2008년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계획’을 거쳐 최근의 K-MOVE 사업으로 변화되어 왔다.

청년고용대책의 종합적인 틀의 시작은 2010년과 2011년에 범 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청년고용대책은 청년실업 악화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및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 주로 직접고용일자리나 실업자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었다. 이에 비해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노동시장 진입이전의 단계와 진입과정 및 진입이후 단계로 종합하고 각 단계별 일자리 프로그램을 내실화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 내일 만들기」 1차(2010. 10)의 내용은 일하고 싶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⁵⁾ 「청년 내일 만들기」 2차(2011. 5) 내용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자기개발과 재도약 기회를 갖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⁶⁾ 핵심 내용은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촉진을 위한 취업이전 단계의 취업지

5)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는 2012년까지 청년친화적 일자리 7만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하며,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정책 방향으로 1) 고용친화적 경제성장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을 높여서 청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2) 청년의 직업경쟁력 자체를 높여 국내외에서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3) 민·관 공동으로 청년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 노력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정책으로 청년사회적 기업가 4천명 육성, 공공기관 인력 증원, 중소기업청년인턴 확대, 해외취업활성화, 대학구조조정을 통한 고학력자 과잉공급의 완화 및 대학의 취업에 대한 책임 강화이다(관계부처 합동,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0. 10. 14).

6) 관계부처 합동(2011), 「청년 내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1. 5. 19

원의 내실화나 창업·창직 등 청년특성별 고용대책의 다양화, 고학력화 문제 및 고졸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열린 고용대책의 종합화를 통해 청년고용대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두고 있다. 아울러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어 청년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일터 학습의 장을 확충하며, 청년과 일터를 이어주는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고 괜찮은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고, 기회의 공정 차원에서 지방대생에게 반듯한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전국적인 청년벤처 창업과 벤처 공동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14년 4월에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청년고용대책⁷⁾은 청년층의 교육·직업훈련, 구직·취업, 직장유지 및 이동 등 전 단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⁸⁾ 교육·훈련단계에서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일·학습병행 활성화를 통한 교육과 취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통해 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직·취업단계는 선취업 후진학 및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취업정보 제공의 내실화와 인턴제 확대 등 청년 취업기회 제공 확대, 저소득층 취업 지원 내실화, 재학중 근로경험 활성화, 기업주도 직무·학력 연계강화는 구직단계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라 볼 수 있다. 취업단계와 관련해서는 서비스산업 육성⁹⁾, 청년 창업지원, 청년해외진출 활성화, 청년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재정·금융·세정·조달 측면에서의 우대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속·전직단계는 중소기업 장기근속 및 경력단절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인턴제의 정규직 전환을 제고를 위한 장기근속자 보상확대¹⁰⁾, 군 입대와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의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주요 정책과제이다.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단계별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세제·예산지원 방안 마련 그리고 성과점검을 통해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 청년층 일자리 사업

청년층 정책이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포괄하고 있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으로 표현되는

7) 관계부처 합동(2014),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2014. 4. 15.

8) 이는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를 보다 보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9) 5대 유망서비스업은 보건의료, 금융,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등이다.

10) 기업지원금 조정 및 근속우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15~29세)의 장기근속 유도,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지방 및 중기 취업과 고용유지 유도 등이 주요 정책과제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청년층 대책들을 유형화하면 크게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고용촉진을 위한 보조금 사업, 직접일자리 사업, 기타 창업 지원 및 해외 취업지원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2015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중소기업청년인턴제, 해외봉사단(ODA), 생활체육지도자 활용 지원,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 22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3,084억 원이고 목표인원은 60,865명이다. 직업훈련으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일학습병행 훈련지원, 기술·기능인력 양성,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에 예산은 6,344억 원이고 목표인원은 85,977명이다. 고용서비스는 해외취업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예산은 517억 원이고 목표인원은 13,434명이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등 5개 사업에 예산은 1,129억 원이고 목표 및 인원은 28,369명이다. 끝으로 창업지원사업으로는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선도대학 및 중소기업서비스기업육성 등 6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은 2,646억 원이고 목표인원은 5,748명이다.

2015년 기준으로 예산 규모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사업들을 보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229,594백만 원),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185,657백만 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166,180백만 원) 등으로 훈련사업과 보조금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1〉 청년 일자리 대책 현황

		청년 100%	청년 50% 이상 (고용노동부)	청년 50% 이상 (전 부처)
'15년도	사업수	22	18	46
	예산	4,964억 원	8,928억 원	1조 3,965억 원
'14년도	사업수	20	18	50
	예산	4,689억 원	8,669억 원	1조 3,654억 원

자료: 고용노동부.

앞의 내용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현황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보다 더 광범위하다.¹²⁾ 고

11) 2015년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12) 고용노동부(2014), 『한 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

용노동부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년관련 사업을 제출받아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청년일자리 대책사업은 취업 지원, 일자리 창출지원, 직업능력개

〈표 2〉 중앙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 현황(2014)

부처명	주요 사업	현황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지원 구직자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해외취업 지원 등 12개 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등 4개 사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일학습병행제, 내일배움카드 등 9개 사업 	25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등	4
미래창조과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지원 ICT 분야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 등 4개 사업 인력양성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공계 국가장학생,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등 6개 사업 	10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재정 지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 등 9개 사업 인력 양성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사업 취업 지원 고교생 진로캠프, 현장직업체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인력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24
외교부	월드 프렌WM 코리아, ODA 청년인턴	2
안전행정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1
문화체육관광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8
농림축산식품부	특성화농고 인력육성프로그램	1
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인력 양성 사업 등	5
환경부	생물자원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4
여성가족부	여대생커리어 개발 지원 등	3
국토교통부	항공인력 양성 사업,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 사업 등	5
해양수산부	청년일자리 지원 '오션폴리텍 양성과정' 등	2
금융위원회	청년희망 키움통장 도입	1
국세청	일자리창출기업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1
병무청	맞춤특기병제 내실화 및 확대 등	2
농촌진흥청	이공계대인턴십운영 등	2
산림청	해외산림인턴 지원 사업	1
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양성 지원 창업인턴제, 산학맞춤 기술·기능인력 양성 사업 등 8개 사업 취업 지원 청년 가젤형 기업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창업 지원 대학생창업아카데미,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등 14개 사업 	26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업 채용연계교육 등	2
청년위원회	찾아가는 청년버스 사업 등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 사업	1

주: 고용노동부(2014), 「한 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발 및 인력양성 지원, 창업 지원 등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사업 수는 중앙부처 133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50개 사업이 있다.

Ⅲ.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인식

1. 기존의 논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정책방향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원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정부의 정책방향에서도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적 진단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대한 논의를 관련 연구결과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연구들이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과잉학력에 기초하여 설명하여 왔다. 청년의 비노동력화 문제를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에서 배태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남재량 외, 2014). 과잉공급된 고학력 구직자들이 자신의 학력과 스킬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구직에 성공한 경우에도 하향취업¹³⁾, 즉 자신의 학력과 스킬 수준보다 더 낮은 일자리에 진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¹⁴⁾

둘째, 노동시장 수요 구조의 변화이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라 대졸자가 급증하였으나 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10여 년 동안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수는 454천 개 증가하였으나 이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년 16.6%에서 '14년에 16.0%로 감소하였을 뿐 만 아니라 같은 기간 동안 이 부문에서의 청년층 종사자 수는 75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주섭, 2014). 이로 인해 청년층 고학력 인력의 저활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

13) 박성재 외(2007)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하향취업 규모는 24.2%이며, 대졸자의 교육 불일치 규모는 24.0%, 직무불일치 규모는 33.8%로 나타나 하향취업 규모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고하고 있다.

14) OECD는 “과도한 교육(over-qualification) 문제”를 고려하여, 전공분야의 직업기회에 관한 정보제공력을 높이고, 대학 - 노동시장 간의 연계 강화가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청년고용문제에 대한 OECD의 정책제언과 시사점』, OECD).

정이다. 양질의 일자리에서의 청년층 수요 감소 및 이로 인한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은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고용보다 경력직 고용을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졌고 비정규 일자리 증가 등 청년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악화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들이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수요 구조 측면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수요 감소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김수현, 2014).

셋째, 노동시장 정착과정에 대한 관점으로 진입시기의 지연 및 잦은 이직 문제이다. 청년들은 졸업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선택하고, 질 낮은 일자리 취업 시에 낙인효과(stigma effect)의 발생위험성을 우려하여 취업을 유보하는 등의 선택을 하는가 하면(금재호, 2012a; 2012b), 하향취업 후 이직을 통해 취업경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금재호, 2013). 이병희(2011)는 노동시장 이행경험이 최근 일자리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청년노동시장 내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 및 이중구조적 측면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일자리 이행기간은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첫 일자리의 질¹⁵⁾은 최근 일자리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었다. 또한 직장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비정규직 경험 비중이 높을수록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년층은 열악한 일자리에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이 힘들다면 첫 일자리로의 진입 시기를 늦추고 미취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남재량(2006)은 청년실업의 원인을 청년의 잦은 이직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집단별로 입직률과 이직률을 살펴본 결과 청년(15~29세)의 입직률은 기간노동력(30~54세) 및 노년노동력(55세 이상)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청년의 이직률은 타 연령층의 이직률에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은 입직의 어려움에 그 원인이 있기 보다는 빈번한 이직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 완화를 위하여 입직을 높이기 위한 인턴제도와 같은 정책은 지양하고,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의 경직성에서 문제를 찾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비정규직이나 양극화 문제가 야기되며 청년층 고용문제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두드러진 이중구조로 인해 부문간 이동이 제한적이고 과도한 경직성과 불안정성이 공존하여 청년층을 포함한 노동시장 외부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점이다.¹⁶⁾

15) 첫 일자리로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비공공부문에서 종사한 경험을 첫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정부의 정책진단은 정책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청년고용문제의 원인에 대한 문제인식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고용대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기반이 되는 문제인식과 정책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은 크게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인식과 기업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청년층 인적자본의 문제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크다. 정부의 정책자료에 나타난 청년고용부진의 원인으로 급속한 고학력화, 산업수요와 괴리된 교육 등 공급측면과 일자리 창출력 저하, 경력자 선호 경향, 청년 창업 감소 등 수요 측면, 그리고 취약한 고용정보와 고용서비스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조기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에 주력(공급측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수요측면)는 경기활성화, 5대 유망서비스 산업 규제개혁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¹⁷⁾

2. 정책 쟁점

많은 이론 및 실증적 논의와 이에 기초한 정책처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층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서 향후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정책처방이나 문제인식이 맞다면 보다 확장적인 정책을 추진하거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및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이 제대로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면 기존의 문제인식이나 정책처방에 대한 재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나 정책처방의 효과성 및 방향에 대한 논의의 검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청년층 고용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정책의 쟁점 및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논의에서 지적된 청년고용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으로 제기된 이슈를 검토해 보자. 첫째, 학력과잉의 문제이다. 학력과잉 문제는 대학수요와 현행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설득력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학력에 따라 일자리의 질이 배분되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장기적으로 이중구조 해소를 목표로 노동시장 및 산업정책이 수행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해결

16)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해법으로 고용보호법제, 연공형 임금체계의 개선, 직무중심의 노동시장 구축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호법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첨예한 이견이 있다.

17) 관계부처 합동(2014),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교육정책」.

이 쉽지 않은 만큼 이동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청년층 고용대책이 노동시장 진입촉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책의 처방을 이동성 촉진으로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미래의 비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진입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지원서비스를 노동이동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성과관리나 프로그램의 전달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청년층의 의중임금이나 취업희망 분야와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이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한 일자리의 지속성이나 일자리의 성과의 제약, 청년기 이후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의 탈락이 발생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동수요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공급중심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갖는 한계가 존재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경제성장이나 산업정책이 주된 해법이지만 성장을 제고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 또한 단기적으로는 청년층 문제의 적극적인 해법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일자리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전통적 방법도 있지만 투자 유치와 일자리 모델에 대한 협약을 통해 목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논의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미스매치의 문제이다. 취업정보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제공해야 할 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일자리 정보나 임금 근로조건을 벗어나 해당 분야에서의 비전, 경력형성의 가능성 등 직업선택과 미래의 직업생애와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관점에서의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정보의 수집 및 전달자가 누구이어야 할 것인가이다. 청년층들이 기존의 취업지원서비스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청년층 취업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와 노동시장 이탈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청년층 대책이 고졸은 주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대부분 취업을 준비 중인 재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중도 탈락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경우 노동시장 정책만으로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통합정책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노동시장 단계별 정책이 정착되고 있고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각 단계별 청년층 목표집단별 대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수행된 청년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동시장 이행 단계별 정책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청년층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노동시장에 취약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거나 들어오더라도 낮은 질의 일자리에 부실하게 통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년층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년기 때 일차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이후 공식 노동시장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구체적인 목표 집단별 정책이 필요하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이행단계별 대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정책수단인 직접일자리사업과 직업훈련정책, 고용서비스 정책들간의 유기적 연계가 여전히 부족하다.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청년층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일자리거나 사회서비스 일자리로서 이들 일자리는 단기 일자리 특성을 갖고 있다. 사업 종료 후 경력형성을 토대로 관련 분야로 취업하거나 경력개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업은 지속되지만 참여자의 일자리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음으로써 일자리의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IV. 청년 고용대책의 방향

1.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층 노동시장 문제의 진단에 대한 논의 중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졸 고학력 인력의 저활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층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은 청년층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초기 노동시장 진입에 초점을 맞춘

노동공급중심의 예산투입은 결과적으로 청년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예산의 사중손실 우려도 있다.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기여도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청년인턴과 같은 사업주 지원방식의 일자리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 청년층의 일자리 유인효과가 이를 확대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인력양성이나 훈련정책 또한 투입된 인적자본의 성과를 확대하고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효과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공급자 중심의 인력양성으로 인력양성 규모 및 취업자의 직무 능력과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여력이 큰 중소기업 현장 수요 간에 괴리현상이 지속되는 현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여력이 큰 중소기업에서의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임금·복지·장래성 등 3저 문제의 적극적 개선이 미흡하여 미스매치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의 중소기업으로 유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여건에서 다양한 훈련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촉진 및 경력형성과 노동시장에서 상향이동이라는 취업성과의 지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개별적 사업추진을 통해서서는 일자리 성과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청년층 문제를 넘어 일자리 정책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다. 청년 고용문제의 해법을 위해서는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경제정책), 교육부문(교육정책), 노동시장 구조(노동시장 정책),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산업정책), 지역차원의 고용전략(지역고용정책) 등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게다가 최근 들어 청년층 고용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여건을 감안할 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청년일자리생애안정성 제고를 위한 청년층 경력형성 지원, 청년층 목표집단별 정책방향 정립,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 강화 및 사회통합정책 방향 정립 등 현안이슈에 대한 보다 체감성 있는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층 고용대책의 상당 부분은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초기 노동시장 취업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이러한 일자리에서 청년층에 대한 수요가 증대해야만 효과를 갖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취업능력 제고 중심의 일자리 대책이 또 다른 스펙경쟁으로 되어 예산의 사중손실이라는 결과를 야기하는 측면이 없지 않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가 취업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촉발시키고 이에 따른 취업준비 피로도를 가중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의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청년기 때 일차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이

후 공식노동시장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낮은 현실은 초기 노동시장 진입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인적자본 투자를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의 점유비율을 높이기 어렵지 않은 현실은 일자리 경쟁을 가속화시킬 뿐 만 아니라 탈락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실감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바람 나위 없지만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취업역량 강화가 극단적으로는 정해진 일자리를 두고 프로그램 수혜자가 비수혜자를 구축하는 상황이 된다면 수혜자 선별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출발시점에서의 일자리 선택이 향후의 지속적인 일자리 성과를 보장해주는 체계가 지속된다면 일자리 경쟁 또한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예산투입의 비효율성도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의 방향을 노동시장 진입촉진지원정책 뿐 만 아니라 청년층 일자리의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 비전이 보인다면 초기 노동시장 진입도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다양한 일자리 경험이 좀 더 나은 일자리로의 디딤돌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정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며 기존에 많이 지적되어 온 이행노동시장 관점과 맥을 같이한다. 이행노동시장 관점에서 일자리 사업들을 정비하고 수요자 맞춤형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정책 방향은 매우 유효하며, 이를 위한 사업의 전달체계와 성과관리의 재구축 및 예산의 재조정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나, 여전히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년 고용정책의 방향

청년고용문제는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 청년층을 수요로 하는 일자리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일자리의 비전이 어두워 진입을 잘 하지 않고, 진입하더라도 이직하거나 저고용상태에 머무르는 노동시장 이행 문제이다. 그러나 30대의 고용률이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탐색적 구직활동 시기가 지나면 적극적으로 취업을 선택한다. 결국 청년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와 노동시장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이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청년고용대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문제를 경제성장이나 기업의 노동수요의 문제로 할 경우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고용거버넌스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 또는 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모델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나누기가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으

며 이는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질 경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¹⁸⁾ 한편,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년연장 문제는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정년연장이 청년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년연장이 논의되고 있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임을 감안하면 이 부문에서의 사유노동력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정년연장 문제는 고령사회에 대한 중요한 정책처방이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확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년연장과 일자리 창출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이지만 임금피크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상생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초기 노동시장 진입 성과보다는 취업이후의 경력형성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로의 진입촉진 문제는 일자리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청년층 고용대책의 상당부분이 맞춤형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공급의 문제가 아닌 일자리의 이행촉진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진입초기의 유인과 경력형성 그리고 상향이동 가능성이라는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진입단계의 유인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해당 직장에서의 장기근속 우대에 대한 지원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경력형성과 노동이동이라는 본인의 선택과 비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층 고용률이 낮은 원인은 일자리 수요의 질적 격차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격차해소가 장기적으로 주요한 과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원을 통해 격차를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청년층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경력 형성 및 기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여 노동시장 정착성을 높이고 향후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 촉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향은 사중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기업지원보다는 근로자지원에 방점을 두거나 양자를 병행하여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책수단도 금전적·비금전적 방안 등 수요자의 필요에 부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을 하게 되면 혜택이 따르고 지속적인 일 경력이 미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과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추상적인 미래의 비전이 아닌 현실적이고 손에 잡히는 일자리 성과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넷째, 청년층 취약계층의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

18)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전략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다. 현재의 정책은 대부분 공식부문으로의 진입과 이러한 진입이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노동시장 진입자체가 쉽지 않고 진입을 하더라도 정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현행 청년층의 고용률 저하는 고졸 이하에서 두드러지며, 청년층 비공식부문 종사자의 사회적 소외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 관점에서, 청년층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대상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통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니트(NEET)는 사회통합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달체계 및 추진주체의 문제이다. 노동시장 이행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단기간에 통합체계가 구축되기 어려운 만큼 노동시장 이행단계별로 정책의 기능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일자리 지원정책의 지도를 마련하고 예산의 배분이나 사업평가도 이러한 틀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칸막이 문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청년층은 지리적 이동에 따른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중앙의 표준화된 정책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지역의 인구변동이나 지역경제를 고려할 때 청년층의 지역내 정착이나 지역으로의 유입촉진은 매우 중요한 지역경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부합하는 핵심역할을 청년층이 담당하도록 하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의 초석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차원에서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청년일자리 개발과 청년의 지역정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인재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춘 인력이 아닌 청년층 그 자체에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이 지역의 동량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주체가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 현재와 같이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훈련이나 일자리 제공과 같은 부문적인 접근으로는 지역차원의 일자리 창출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역내생적 성장전략에 기초한 지역단위에서의 일자리 창출모델을 산업발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숙련형성이라는 틀 하에서 지역고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KLI**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4), 「2014 한 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
- 관계부처 합동(2010),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0. 10.14
- _____ (2011), 「청년 내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1. 5. 19.
- _____ (2014), 「학교에서 직장까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4. 4. 15.
- 금재호(2012a), 「청년취업난의 악화(Ⅰ): 피해자는 누구인가?」,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17~38.
- _____ (2012b), 「청년취업난의 악화(Ⅱ): 일자리 질은 개선되었는가?」, 『노동리뷰』 8월호, pp.39~57.
- _____ (2013), 「청년의 고용불안과 재취업」,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66~82.
- 김성호(2013), 「청년고용문제에 대한 OECD의 정책제언과 시사점」.
(<http://oecd.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
- 김수현(2014), 「청년고용문제의 실태와 원인」, 『서울경제』 8월호, 서울연구원, pp.11~19.
- 김주섭(2014), 『고령화 저성장시대 노동시장 정책과제: 청년층 노동시장 활성화』, 경사연 협동연구과제, 미발간.
- 남재량(2006), 「청년 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22~33.
- 남재량·김세움(2014),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박성재·반정호(2007), 「청년층의 하향취업 원인과 노동시장 성과」, 『사회보장연구』 23(4), 한국사회보장학회, pp.1~28.
- 통계청(2015), 「고용동향」. 2015. 5.
- _____,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
- _____,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_____, 「지역별 고용조사」 (구 인력실태조사) 원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4),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